

광주 방문 평화당 ‘당권도전’ 3인... “내가 책임자”

민주평화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광주·전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3단계 연대’, ‘새 인물’, ‘경제살리기 책임자’를 내세우며 광주·전남지역 당원과 지역민에게 당 재건의 책임자라는 점을 역설했다.

당대표 선거 주자들이 호남에 남다른 공을 들이는 데는 호남에 정치적 뿌리를 뒀다는 상징적 이유도 있지만,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결국 전당대회 당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평화당 전체 당원 9만4,000명 가운데 45%가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다. 전북으로 영역을 넓히면 69%에 달한다.

평화당 당권주자로는 이들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출마했으며 당원투표 90%에 국민여론조사 10%를 더해 당대표를 선출하고, 2~5위는 최고위원직을 맡게 된다. 1~2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을 실시하고, 3~4일 ARS 당원투표와 국민여론 조사가 진행된다.

선거결과는 다음달 5일 오후 3시 K-BIZ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확정·발표된다.

최경환 “진보·보수 균형 깨지고 호남예산 빨간불”
정동영 “5당 연대 통해 선거제도 개혁 이끌겠다”
유성엽 “호남 정치 되살려 호남정권 재창출할 것”

◇호남정치 세대교체 시점

‘DJ 마지막 비서관’ 최경환 의원은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인물로의 교체와 호남의 전략적 선택, 당 운영비전 등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인물이 곧 변화고,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최경환 당대표’다”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정치권이 ‘올드보이’들의 경연장으로 전락할 수는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상상황에서는 강한 충격이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가는 적당한 길을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며 “여의도, 광화문, 지방, 여야 할 것 없이 노무현·문재인 사람은 넘쳐나지만 ‘김대중 사람’은 없다. 새 인물이 쑥쑥 등장하는 영남처럼 호남도 세대교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신진과 초선·중진을 삼각 축으로 당을 운영하고, 선두에서 최경환이 ‘변화의 기관차’가 돼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 승부를 걸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당대표가 상실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며 “예산심의를 다가오는데 호남지역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해 동력이 떨어지면 호남정치의 위상과 발언권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와 보수가 2대 2로 교섭단체 균형 이루고, 예산확보를 위해 손금주 의원이 필요하다”며 “호남정치 회복을 위해 꼭 참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간절한 러브콜을 보냈다.

◇3단계 연대로 제시
정동영 의원이 이날 같은 장소에서



최경환

정동영

유성엽

자회견을 갖고 “민주평화당이 사느냐, 죽느냐 생사여부는 광주·전남이 결정하는 만큼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14일 출마선언 이후 2주일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그는 “노회찬 의원에 대한 추모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며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서서 싸워온 노 의원의 정치업적에 대한 그리움과 추모가 담겨 있다”며 “평화당 대표가 되면 당내통합과 함께 우리 사회 약자편에서 서는 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평화당의 생존전략으로 “3단계 연대를”을 제시했다. 1단계는 연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평화당·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간 5당 연대, 2단계는 재벌개혁 입법과 권력기부 개혁, 기무사 폐지 등을

위한 평화당·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간 4당 연대, 3단계는 3당 협치내각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년 전 김대중 총재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의 기치를 내걸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대중경제론을 실천해 마침내 집권에 이르렀다”며 “평화당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때 대한정당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 축소·개혁 추진 경제살리기야장

유성엽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당이 미워도 호남정권 재탄생을 포기하지 말고 준비해가기 위해서는 평화당을 살려야 한다”며 “당을 재건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은 유성엽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어려운 이유

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81만개로 늘리려는 공약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평화당이 나아갈 길은 정부 여당의 치열한 경쟁자이자 실력있는 대안정당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그것이 촛불정신과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와 시대 앞에 주어진 평화당의 정치적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화당은 변화가 필요하다. 당명만 빼고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전문가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당, 경제·민생·민주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아시아문화전당과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 평화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살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새 간판이 필요하다”며 “유성엽이 평화당의 미래가 돼 새로운 호남의 힘이 되겠다. 선·후배·동료 의원들과 함께 아무진 당대표가 돼 평화당을 원내 제1당,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김동철, 민간임대·공공주택특별법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권리보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차인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필요경비 지원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 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임원·동별 대표자 등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며 ▲임차인 대표회의에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도 임대주 택도 임대주 택단지 규모에 따라 임대료 증액한도를 제한하고, 초과임대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경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지난달 31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청소·경비·승강기 등 공용관리비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도지주공사(LH) 등 사업자가 관리비 일부를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사업자가 관리비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거 취약계층



층의 부담을 경감했다.

김 의원은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필요하다”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관리비는 일반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임대주택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조사연구 시동”

향후 1년 이내에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조달청을 통해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조사연구 계약자로 국책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전남 서남권의 지역특성, 의료여건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고, 보건료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의과대학·부속병원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조사



연구의 목적과 배정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조사연구에는 지자체 지원 의지와 계획 의로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조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면서 “지난 30년 지역주민 숙원이 정부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회의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함진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바른미래당 채이배,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연합뉴스

민주 당대표 신경전...송·김 ‘공세’·이 ‘대세론’ 이재명 경기자사 탈당문제 공방 격화 속 초반 기선잡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간 표심잡기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자사 탈당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격화하는 모습이다.

송영길(56)·김진표(71)·이해찬(66) 의원 등 3명의 후보(기호순)는 지난달 31일 전당대회 초반 기선잡기를 위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송영길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공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반면, 이해찬 의원은 ‘대세론’을 굳혀간다는 인식 아래 공세에 신경 쓰지 않고 정책행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모 방송에 출연, 김 의원이 조폭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지사를 향해 “탈당 압박성” 발언을 한 점을 거론, “선거용으로 활용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생물체든 어떤 조직이든 때가 되면 죽는 세포는 몰라내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야 신체나 조직이 건강한 것 아니겠냐”며 세대교체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를 둘러싼 문제가 상식과 원칙적인 측면에서 매듭지어야

다 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모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탈당, 지명했던 다른 의원과 비교해 보면 이 지사는

관대하게 보호했다”며 “(이 지사) 취임 후에 문제가 확산하고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되니까 선당후사의 자세로 이 지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타 후보의 공세와 이 지사를 둘러싼 논란에 무대응 전략을 취하는 모양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타 후보의 공격에 대해 “이 의원이 앞서가는 것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며 “저희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듣고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진행 상황도 점검하고 있다”며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이 현장 정책행보에 관심이 많이 가져 예비경선 때보다 분위기가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더 좋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신경전과는 별도로 각 후보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표밭을 다지는데도 여념이 없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중랑구 망우리 묘지공원을 찾아 죽산 조봉암 선생 59주기 추모식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서울 강서병·강서갑·서초를 지역대의원대회를 찾았다.

“유능한 경제 당대표론”을 들고나온 김 의원은 중구 을지로에 있는 SK오픈콜라보 센터를 찾아 경제정책 간담회를 했다.

이 의원은 전남 광주 현장방문에서 이날은 전북 익산을 찾아 정책 테마일정(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을 소화했다.

이 의원은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면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폭염, 특별재난 준해 전기요금 제한적 배려” 이 총리, 국무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기요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특별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격정도 커진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면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번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력수급은 휴가철이 본격화해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면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며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